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홈플러스 본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관련 설명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관한 피해자 발언 - 홍명근, 김포시민
- 대규모 피해 관련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검찰 정보공개 요청 등 향후 대응계획 -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 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 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현재 대응 중인 집단분쟁조정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며 정당한 피해구제를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5년 3월 2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